

□공동대표: 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정책위원장: 박상인 □사무총장: 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withcej 후원 008-01-0567-507(국민)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박상인 본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문의 :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오세형 팀장, 정호철 간사 / 02-3673-2143)

- 시행 : 2020.10.22. (총 1매, 별첨 2부)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CVC이란, 재벌과 같은 대기업집단이 대주주 자격으로 벤처투자회사를 소유·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CVC는 정부가 최근 7월 30일 벤처투자 활성화와 하반기 경제정책 대책으로 내놓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이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투자자나 주주들이 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경영주의 주식에만 싣아 경영주가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복수의결권 행사토록 하여 기업 경영권을 독점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은 정부에서 제2벤처법 확산전략(2019.3.6.) 발표 이후, 금년 10월 16일에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과도 같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CVC·차등의결권은, 선진국들의 다수 사례·연구·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벤처·창업 활성화나 투자 유인책과는 하등의 관계조차 없는 것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재벌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경영권세습, 경제력집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벤처 전체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CVC·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한 국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정부 도입안의 허와 실을 밝히고자 각각 8문항(총 16개 Q&A)으로 구성된 질의·응답 형식의 반박 서면을 작성하였다.

- ※ **별첨.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정부와 국회는 벤처를 핑계 삼아 5%미만의 보이지도 않는 혁신과 희박한 성공 가능성만 집착하지 말고, 95%이상의 필연적 실패와 전 세계에서 실증된 재벌문제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